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4조6000억 투입… 친환경·AI 중심으로 재편

원년 선포…근로자 보호 확대·고용부담 완화도

전남도가 올해를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 4조 6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를 러스터 공모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수소환원제철 중심 설비 전환과 철강·금속산업 AI 전환으로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상반기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대응해 고부가 전환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구축, 미래소재

중심 스페셜티 화학산업을 육성한다.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전력 공급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여수시와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정부와 10대 석유화학 기업 간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20~30% 감축 합의에 따라 주요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 예비비 3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2025년 473억원, 2026년 1530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7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공정개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 맞춤형 기업 지원’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

진한다. ‘무탄소 NCC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폴리올레핀 기반 고부가 다공성 소재·공정 기술개발’, ‘여수국가산단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등 고부가·스펙터티 연구개발과 AI 첨단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지난해 미국 고율관세 대응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2030년까지 3983억원을 들여 금융지원, 철강 연구개발, 고용 안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기반 대형 철강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과 ‘SMR용 고온 스테인리스강 합금·제조 기술개발’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축적한 대응 성과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026년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하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나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홍남

여야, 12·29 참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집중 추궁

국정조사특위 “납득할 설명·책임규명 없다” 질타

피해자 지원 등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통과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적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이 다 마련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둔덕의 콘크리트가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설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설치) 지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태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미에 의원은 “핵심은 둔덕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경찰청도 국토부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가 중인 신청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왜 이런 설계변경을 승인했는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공식 설명이나 책

임 규명이 없다”고 추궁했다.

유 대행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이 사고 관련해서 총 45명을 입건했고,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34명을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은 로컬라이저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항시설법 위반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는 기동지시(유도로·활주로)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 업무의 목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고시보(NOTAM), 항공정보회람(AIC), 비행전·후 정보 등을 통해 비행장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

김영록 도지사, 18일 ‘북콘서트’

컨텍스트…45년 정치 여정 ‘김영록의 진심정치’ 공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영록 아카이브: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통합의 새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말 발간한 자서전 ‘김영록의 진심정치’에 녹여낸 45년의 공직과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도민들에게 이야기한다.

김 지사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 공직자로서 살아온 여정, 진실한 정치에 대한 생각, 바람직한 대한민국 미래 등을 직접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통합을 전격 제안한 이유와 통합 후 광주·전남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날 행사는 사전 기념촬영, 축하발송, 북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서 ‘김영록의 진심정치’는 프롤로 그, 1장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리고 27년의 공직생활’, 2장 ‘김대중의 ‘정치’를 새기며 정치의 길로 들어서다’, 3장 ‘새로운 비전으로 전남을 깨우다’, 4장 ‘다시 찾은 민주정부와 전남

의 과제’, 5장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주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6장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에필로그,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자서전 성격인 ‘김영록의 진심정치’와 민선 7·8

기 주요 정책을 다룬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발간했다.

‘지역을 아끼고 사람을 돌보는 리더의 진솔한 이야기’를 부제로 하고 있는 이 책은 김 지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한 정책,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한 정책,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선 정책, 전남의 자원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화한 정책, 논리와 정당성을 따져 관철한 정책 등을 담았다.

이 저서에는 우리나라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인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정책 기틀을 마련한 이한주 대통령 특별정책보좌관, 해양·조선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이 김 지사의 정책을 평가한 글도 함께 실려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재투표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설립 분수령”

도의회, 국립순천대 ‘통합 추진 재투표’ 적극 참여 촉구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15일 순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대학교 추진 재투표’와 관련해 “이번 재투표는 변화한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향방을 가늠 매우 중대한 절차”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정부가 의료인력 공급 체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단계로 넘기며, 정책 결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투표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명확해진 국가적 방향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전남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의대 특위는 전남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열악한 필수 의료 여건,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정부 정책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며 “대학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낼 때,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현실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특위는 “이번 재투표가 어떠한 부담이나 압박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선택은 대학 공동체의 책임 있는 고민의 결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순천대학교와 전라남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전남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